

가족문화와 가치관 교육의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 방안 탐색

전세경*¹⁾

공주교육대학교*

Exploring the causes and overcoming of low fertility in terms of family culture and value education

Jeon, Se Kyung*¹⁾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the importance of 'family culture and values' in the process of diagnosing and discussing the causes and measure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sought to find the causes of over-fertilization and ways to cope with it in terms of educational approach to establishing family culture and values.

Specifically, this study firstly reviews the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 by examining the evalu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secondl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nges in family culture and valu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third,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validity of educational intervention, the actual state of interven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in institutional education, the necessity and effect of education,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possible policies and arguments based on educational approach.

The issue of low birth rate is a national social problem facing the Korean society in the modern age. Considering its causes and countermeasur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ors of family culture and value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To further emphasize the educational approach to gender equality and family-friendly family culture and values,

Key words: 저출산(Low fertility), 저출산정책(Low fertility policy), 가족문화(Family culture), 가족가치(Family value), 가치교육(Value education),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Jeon, Sekyung, 27 Woongjinro, Gongju,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041-850-1693, Fax: 041-850-1690, E-mail: jeonsk@gjue.ac.kr

2) 이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16년 11월 29일 공동주최한 2016 사회정책연구협력망 종합포럼 :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본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논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임.

I. 서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으로서(KOSTAT, 2017), 국가·사회적으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여러 학술 연구나 정책 평가 등(Chung, 2015; Kim, 2015; Lee, 2016; Lee, 2016a, 2016b)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고용, 주거, 육아비용, 사교육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성차별적 제도, 일·가정 양립곤란 문화, 기타 관행 등의 ‘사회구조적 요인’, 결혼관, 자녀관, 가족관과 같은 ‘가치관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요인들의 가중치를 측정한다거나 요인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지만, 많은 연구(Chung, 2009, 2012; Kim & Kim, 2008; Lee, 2016b; No, 2013)에서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족문화와 가치관’과 같은 요인이 저출산의 또 하나의 본질적이고도 심층적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고(Oh, 2015), 전통적 가족가치관과 사회문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저출산은 극복하기 힘들다(Chung, 2015)고 보는 것이다. 또한 그 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인구학적, 경제학적 접근만으로는 역부족이고 다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Kim & Kim, 2008)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과 같은 결혼출산친화적인 인식과 문화가 사회경제적 대책과 결합되어야(Lee, 2016)하고, 저출산 문제의 논의에는 문화와 환경이 근본 배경이 되어야 한다(Lee, 2016b)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용소득 불안정’과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결혼관 자녀관 약화’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문화나 가치관과 관련된 현상을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 원인의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전개나 관련 정책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가족문화

와 가치관’의 문제에 집중하되, 이는 학습에 의해 정립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즉,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어떠한 가족문화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형성, 정립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에서 이를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적 접근’의 관점은 저출산의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여러 과정과 접근 중 하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간의 여러 정책들이 경제적 지원이나 육아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Lee, 2016a; Kim, 2015; Yu, 2012)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을 다루는 것에 의의를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쟁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의 정책 입안 및 제도교육의 전개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 문헌 등의 내용을 통하여 첫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을 고찰함으로써 저출산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고 둘째,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문제를 쟁점화하여 교육적 개입의 타당성, 개입의 실태, 제도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검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적 접근으로 가능한 정책들과 논거 등을 살펴본다.

II. 저출산 정책의 평가 자료를 통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재인식

1. 저출산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내용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통계 수치 및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내놓는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최근 한 조사(embrain, 2016)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6.4%,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5.2%, ‘요즘은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13.7%로 나타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실망 및 냉소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제 3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1차, 2차 기본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평가 내용은 첫째, 내용과 적용범위(대상)에서 한계(보육 지원에 치중,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만)가 있었고, 둘째, 사회구조적 맥락 고려 없이 서구의 저출산 대책을 도입하는 데 급급하였으며, 셋째, 고용, 주거, 교육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고, 넷째, 치밀하지 못하고 너무 방만하게 대책을 수립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3차 기본계획은 그 패러다임에서부터 변화를 의도(Lee, 2016a)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2차의 성과의 극대화와 한계 개선, 도입된 제도의 실천 및 문화 조성, 미시적·현상학적 접근에서 거시적인 접근을 강화하는 통합적 접근 시도, 전통문화와 현대사회상 간의 충돌을 줄이는 문화적 접근과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균형적 접근, 모든 세대를 고려한 세대 통합적 접근 의도,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이므로 지방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의 역할 강화 등이다. 또한 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하고 있으며, 추진 전략으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해소,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교육보육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3차 기본계획이 그간의 정책이나 기본계획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현실적 요구를 토대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몇몇 연구들(Chung, 2015; Kim, 2015; Yu, 2016)은 3차 기본계획이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기한다.

- 저출산 원인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분석 등 심층적 분석 부족, 정책의 중심적 철학 부재.
- 세부과제들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실효성 부족(예. 초혼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 등).
- 결혼문화와 인식개선 문제의 정책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려면 장기간을 요하는 것들임.
- 기업의 적극적 협조 등, 국내의 경제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불안정 해소는 불가능함.

- 아동복지의 성격이 강하고 원래 사업들을 저출산 정책으로 포장한 경우가 대부분임.
-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 대책이 혼재되어 있음. 과제가 부처별로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나열식)되어 있으며,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부처 간 소통,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취약.
- 양육지원비가 인센티브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육비보다는 사교육비가 더 문제이며, 소요되는 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 재정투자가 비효율적임.
- 성평등 관점 및 여성고용정책이 배제되어 있음. 여성의 가사분담과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 없이 추진되는 보육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상의 평가들은 3차 기본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추진 방향, 추진 계획에서의 내용과 동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문제, 정책 수행 및 운영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저출산 원인에 대하여 근본적 진단과 그 진단에 대한 해결책과의 관계를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3차 기본 계획이 그간의 보육출산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나, 실제로 사업 구성 및 전개의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는 지속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2. 저출산 원인에 대한 재검토, 재인식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은 학계나 정책 입안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이를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경제적·사회구조적·가치관적 요인,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차원의 요인, 거시적·중범위적·개인적 요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 직접적·간접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견해를 볼 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재인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출산 요인을 현상과 혼돈하지 않고, 개별화, 세분화

하기 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진단과 대책에 대한 관계의 파악이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혼은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문제’도 표면적으로는 개인에게 속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 즉, 사회적 불평등에 따른다. 능력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 및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사교육의 문제 등이 그 예이므로 보다 큰 틀에서의 조망이 필요해진다. 만약 저출산의 원인을 개별화 또는 세분화하여서만 이의 대책을 고려한다면, 표면적으로 명확한 듯하나, 자칫 단편적, 단기적, 나열식 정책으로 치우치기 쉽게 되고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출산 대책은 그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배경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힘들 것이며 설사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오래가기 어렵다.

둘째, 저출산 원인들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제기하는 원인이 다를 것이며, 소득 계층에 따라서, 자녀수에 따라서도 그 원인이 다를 수 있다. 1자녀, 2자녀 기혼 여성 모두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 이용 경험이 추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Chung, 2012)를 볼 때,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셋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가족 문화와 가치관 요인’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적 요인’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Kim et al, 2012) 때문에,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객관적, 주관적 지표로도 파악할 수 있는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자타의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혼도 하고 자녀를 (더) 낳겠느냐 라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Kim et al, 2012)도 존재하므로 저출산의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족 문화와 가치관 요인이 좀 더 주목받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의 내용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진단의 분석 방식 및 내용에 따라 해결 정책의 방향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저출산 현상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사회 환경, 경제체제, 가족형태, 문화 등의 변화의 산물이므로, 몇몇 세부 정책만으로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거대 담론에 대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공론화 과정에서의 분석은 좀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이며 종합적이어야 한다.

III.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

1.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남성 중심, 자본 중심 결혼 문화

한국에서 여성근로자가 결혼을 해서 보는 경제적 손실은 월 35만원, 연간 420만원으로 제시되고 있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경제적 손실만이 아니라 여성에게 현대 우리 사회의 결혼이라는 제도는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남성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추어진다. 이는 남성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강화시키는 가부장제 결혼과 가족제도가 잔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결혼의 구조가 자본주의와 맞물려 남성 우위로 나타나는 결혼 경사(gradient) 현상을 보이면서 일부 남성은 결혼을 ‘못’하고, 여성은 결혼을 ‘안’하는 양태를 보인다. 소위 ‘골드미스’와 ‘농촌총각’이라는 용어로 집단 대상화되면서 이들 여성은 결혼을 안 하는 것 뿐 아니라 학력과 직업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결혼할만한’ 남성을 찾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들 남성은 자신을 매력적인 결혼상대로 여겨 찾는 여성이 적어짐으로 우리 사회의 결혼 풀(pool)에서 소외되어간다.

한편, 결혼 시 비용을 남자가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과 여성들에게 혼수로 인한 갈등이 집중된다는 것은 남성 우위의 결혼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남녀 간 결혼 비용 평균을 보면 결혼전체 비용 중 예비신랑이 63%(1억 7천 275만원), 예비신부가 37%(1억 145만원)로 약 6: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Yunhap News, 2016.2.1). 게다가 전통적 성역할의 문제는 종종 갈등의 소지가 된 채 가족생활 속에서 잔존, 유지되어간다. 전통적 성역할은 결

혼과 가족에서의 규범은 부계 중심으로, 정서심리는 모계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행동의 불일치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가사노동 부담 집중의 패널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있어 여성은 아직도 일차적 책임에 놓여 있다. 취업여성의 경제활동 양태인 M커브(경력단절과 재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고리 4R로 표현되는 현상(초기 고용 진입(Recruit)은 양호, 출산과 자녀양육 시기를 기점으로 경력 유지(Retention) 어려움, 경력 단절 후 재진입(Re-start)의 기회는 취약, 고위직이나 관리직으로 진출(Representation)은 더욱 어려움)이 이를 반증한다. 한국의 남성 임금격차는 2014년 36.7%로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OECD official facebook, 2016), 이 수치는 2000년 40%에서 14년 동안 불과 3.3% 낮추어진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육아와 직업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은 전일제보다 유연근무제를 선호하지만 2013년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 중 5.3%만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맞벌이 남성들의 가사노동 공유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듯하나, 실제 가사노동 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은 남자 0.7시간, 여자 3.3시간(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48.1%이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남편은 17.8%로 나타나고 있다(KOSTAT, 2016).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의 양과 질에 대한 실태 및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역시 1차적 책임이 여성(아내)에게 있다는 인식과 태도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한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자조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는 맞벌이가정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거는 취업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취업여성에게는 어찌 보면 지금보다 가정 일을 더 많이, 더 잘 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3. 제도와 맞물리지 못하는 사회문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 육아휴직 실태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끌어내고 그 동기도 적극적인 '아빠됨'의 의미를 의도하게 하였으나 201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이용지수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용 이유와 주위의 인식도 남성 육아휴직을 온전한 목적으로 쓰기 어렵게 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안)하는 이유는 제도적 불가능(34.4%), 직장분위기상 어려움(31.4%), 수입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11.5%), 직업경력의 손실(5.6%)을 들고 있다(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4).

남성 육아휴직제도 이용에 대한 질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가능하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워 그 이용 실태가 매우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의 본래 목적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일 중심의 사회구조와 남성육아를 왜곡해서 보는 사회문화적 인식과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에게 육아휴직이란 다른 기회(이직, 창업, 유학, 자격증)를 얻기 위한 발판이라든가, 그만 둘 때만 쓰는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회사에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못 쓴다는 판단 등(Joongangilbo, 2016.8.19.)이 그 예이다.

한편, 육아휴직 등 경력단절로 인해 소득이 낮게 되면 부부간 권력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식물제도(연금 등) 실태이며, 심지어 이혼을 하거나(재산분할), 다치거나(보험 등) 해야만 확인되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과 육아의 평가절하된 가치는 부부간 경제적, 심리적 권력관계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고 있다.

4. 가족 및 자녀 가치관의 실태와 변화

저출산 현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녀 안 갖기, 자녀 줄이기 각 개인의 삶의 경로에서 선택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학적,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출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별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 출산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혜택과 비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주관적이기도 하고 측정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가족과 자녀가치관의 실태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과 자녀가치관의 실태와 변화는 한마디로 개인화의 경향을 보인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2명 중 1명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51.9%)하고 있으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할 수 있다.’는 비율은 높아지고 (2010년 40.5%, 2016년 48%)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줄어들고 있다(2014년 44.4%, 2016년 39.5%)(KOSTAT, 2016). 물질만능주의,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이 퇴색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관련 ‘가치관’에 주목한 최근의 많은 연구(Cho & Kim, 2011; Do, 2011; Kim & Lee, 2014; Kim, 2011, 2012; Lee, 2012; Lee, 2016a; Na & Kim, 2012; Oh, 2015; Seo & Kim, 2015; Yu, 2012;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4)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가치관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결혼의 필요성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고 여자가 결혼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의무와 역할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관에서 개인화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우기 힘들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 자녀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 등의 가치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못지않게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저출산의 문제가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자녀)관, 남성 생계부양 가족주의의 해체와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한다.

IV. 저출산 대책 관련 논의 쟁점 :

‘교육’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가?

성평등과 가족친화적 가치는 제도과 더불어 문화의 문제이나, 이는 ‘교육’의 영역이기도 하다. 성평등 의식과 가족친화적 가치는 지식과 달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있으며, 한번 형성된 의식과 가치는 변화하기 어려우므로 의식과 가치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의 쟁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제기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정책 제시의 타당성 : 국가가 ‘가족(성평등, 가족친화적 가치)에 대해 교육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국가 개입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의 문제가 개인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오기 때문에 적극적인 가족정책, 공공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가능하다. 다만 그 방식이 ‘교육’이라면, 국가는 ‘아이를 낳아라’의 강요된 교육이 아니라 혼인과 출산 및 양육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구조적 어려움들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 논리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관에서 펼치는 가족생활교육의 입장이나 목적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즉,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개인과 가족의 가치는 변화하였고, 고유한 가족의 기능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교육과 같은 외부 지원으로 가족의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저출산 정책 입안시의 교육에 관한 입장은 이미 3차 기본계획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가치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는 것인데, 이 점에서 ‘가족에 대한 교육’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가족’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 ‘가족’에 대한 교육 정책을 구현하는 타당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면, 우선 무엇(내용과 지향)을 어떻게(전개 방향, 방법) 홍보와 교육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쟁점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의미나 효과(가역성, 적시성, 효율성)와 관련하여 타깃 계층을 정확히 설정하는 일, 책임 있는 자세로 실현 방법까지 계획하여 수행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2. 현재 '교육적 개입', 혹은 '개입 계획'의 실태는 어떠한가?

가. 3차 기본계획에서 '교육' 관련 내용

<Table 1>에서 보듯이 3차 기본 계획에서의 '교육' 관련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④ 맞춤형 돌봄 확대와 교육개혁으로서 자유학기제, 재학단계 일·학습 병행제, 선행학습영향 평가 실시, 수능영어 절대 평가로 사교육 부담 경감을, 전사회적 추진동력 확보로는 ② 대상별 맞춤형 인식 개선 대폭 강화로 학교 인구교육 확산,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결혼관 제시,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홍보, 남성가사 육아분담 문화 확산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차 기본 계획의 저출산 대책 분야는 부처별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교육부가 담당하는 세부 과제를 추출, 정리해 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교육부 담당 세부 과제는 네

개의 분야에 걸쳐 있는데, 그것은 1. 청년 일자리 주거 대책 강화, 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4.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 이 중 세 번째 분야에 가장 많은 세부과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3차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관련 과제들은 임팩트가 약하며, 사교육 경감 대책은 체감도가 낮고, 직접적 대책이 아닌 것도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역할은 일차적으로 교육부에 모아지나, 교육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세부 과제는 4개 하위 분야 중 3개에 걸쳐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수는 총 91중 11개로, 상대적으로 적고, 세부 사업의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거나 선언적이다. 3차 기본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 정책, 전략, 세부과제, 구체적 사업 등의 관계는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제시 방식에 따라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라는 대책 분야 중에서는 교육부의 '교육'과 관련된 역할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점도 있다. 즉,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 강화와 인식가치관 형성교육 강화로서 인구교육 추진지원율, 여성가족부는 범국민적 양성평등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인식 가치관 형성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제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역할과 책임도 적극적으로 더해져야 할 것이다.

Table 1. Main contents of education-related tasks in the 3rd basic plan

Major Policy Tasks	④ Personalized care Enlarge, Education Reform (Education Reform) Free semester-Work parallelism-Aptitude-based education that leads to adoption of NCS-A fundamental problem of inducing private education through strengthening employment linkage - Perform pre-learning impact assessment, Absolute Assessment of English Proficiency Test('17) Reduc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 Stage of enrollment Work parallelism Enlarge : (High school) Major industry,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College) High school + College Integrated education business, (University) Long-term field practice type Work parallelism Enlarge • National Competency Job Standard : To improve recruitment culture centered on academic speculation... A structured national standard
Secure all social driving force	② Significant improvement in customized recognition per target - Children, Youth : Formation of family-friendly values using school education, Reflected contents of textbooks, School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 2030 Single men and women : Presenting a new marriage* that a young generation can sympathize with, *Marriage without bubbles centered on love, Gender equality partner - Married households(Working couple) : Promoting a positive message to the parents who have the second or more children. Spreading the culture of male childcare sharing

보건복지부, 16.5.24 '저출산 대책 주요내용 발표'에서 발췌.

Table 2. The third basic plan Detailed task of Ministry of Education in the area of low fertility measures

Field	Detailed task	Specific business
1. Strengthening measures for youth employment and housing	Promoting corporate attraction as a major job	Scholarship support for SME employment, Hope ladder scholarship
	Strengthening links between education and employment	Strengthening of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Improving housing conditions for students couples	-
2.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for childbirth	Expand customized services for stable polic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support
3. Personalized care Enlarge, Education Reform	Safe and reliable child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Expansion of kindergartens in elementary schools, Enlarge the Nuri course, Improvement of operation of kindergarten after school course
	Nursing Care Eliminate blind spots	Expansion of college student childcare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responding to demand for elementary care	-
	Reorganization of education employment system for conversion to aptitude ability center	Free semester for searching for aptitude, Promotion of Lifelong Education College for Adult Learner Education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capacity	-
	Reduc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i>Conducting pre-learning impact assessment on university test,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Regulation of Preceding Education, In order to check whether the private education entrance is a cause of the private education entrance examination</i>
	Reduce tuition fees	-
4. Eliminate work-family blind spots	-	-

*Yu(2016)의 내용에서 재구성, 일부내용 이탤릭체는 Lee(2016a)의 연구에서 보완함.

나. 국가 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 및 실태

국가의 저출산 대책 교육 정책의 접근 방식과 실천 의지를 살피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적시성, 타당성, 효율성, 책무성을 말해 주며, 도농, 빈부, 남녀 구분 없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의 공적, 총체적 계획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그 구현의 장으로서 학교에는 잠재적인 미래 결혼과 출산 당사자들인 아동과 청소년이 있고, 교육 내용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사가 공간적, 기능적으로 함께 존재한다.

지난 2015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저출산 관련 교육(혹은 내재적으로는 가족친화교육,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요청, 강

조, 관심은 특별히 공식적으로 전개된 바 없으나, 전통적으로 교과외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을 고려하여 볼 때, 가족친화교육은 초·중·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사회, 도덕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중, 가족친화관련 내용을 내용체계의 내용요소로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내용을 보면 국가 교육과정에는 학교 급별로 교과가 갖고 있는 성격 및 당위성에 따라 저출산 관련 가족친화적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과는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문제’를, 도덕과는 ‘덕목’을 중심으로, 실과(가정과)는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족친화교육의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의 수행, 교육과정 구현에서 구성과 운영은 별개의 문제로 여겨진다. 예를 들

Table 3. Factors of "Family – Friendly Education" in Low – Fertility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School level	Subject	Content(content element)
Elementary school	Practical Arts	Relationship between me and family, Caring and care of family needs, Home life and work, Sharing and practice of home work
	Social	Changes in the role of family members
	Moral	Respect for life
Middle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Changing family and health home, Family relationship, family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with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 Life design and career search
	Social	Role conflict, Population problem
	Moral	Family ethics, Sexual ethics
High School (Select)	Technology·Home Economics(Nomal Select)	Love and marriage, Preparation for parenting, life and childbirth during pregnancy, Child care, Family culture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 Family healing and recovery, Utilization of family life welfare services, Family life design
	Home science (Career Choice)	Developmental work according to individual life cycle and family life cycle, Support for individual and family development, Marriage culture and happy marriage , Family law and family welfare service
	Social Culture	Low fertility and aging, Multicultural change
	Life and Ethics	Bioethics, Love and sexual ethics

* 동일한 수준에서의 비교원칙 및 구속력의 수준을 고려함. 굵게 표시한 부분은 양성평등, 저출산 극복교육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연구자)

어 실과(가정) 교과는 저출산 관련 가족친화교육과 매우 밀접한 교과이나, 그 운영의 실체를 보면, 다루는 내용에 비해 해당 교과 시간이 매우 적거나, 교사 수급과 운영의 문제, 교과군에서의 편성(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 중 정보 34시간 기준)의 불리함,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편제 구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관련 교육 실태를 파악한 Cho &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과 출산에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70.1%)’, ‘있다(29.5%)’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과 보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TV(49.3%), 인터넷(22.2%), 학교(16.0%)로 응답하여 학교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교육적 역할에서도 취약한 실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학교 교육에서의 성평등, 가족친화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고, 구체화하며 운영 실태에서 나타나는 저해 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의식, 가족친화적 가치 함양은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므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시기에 학교에

서 바람직한 결혼과 출산, 건강한 가족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저출산 관련 가족친화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정교과의 역할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까?

저출산 극복이 교육으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가정은 중단적 연구나 다른 요인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글의 전개상 이 부분을 직접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나, 역으로 과거 우리 사회에서 산아제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교육이 전개된 바 있었고, 이로써 그 효과성을 짐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지금의 교육의 내용과 접근이 과거와 같은 캠페인이나, 직접적이고 주입적인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학계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적시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효과를 밝힌 경험적 연구들(Jun & Oh, 2010; Kim, Yu & Kim, 2012; Lee, 2012; Na & Kim, 2013; Oh, Kim & Kim,

2014; Wang, 2013; Wang & Lim, 2014; Yang, 2015)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교육의 대상으로 보아 교육의 효과로서 결혼과 출산 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 변화라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 내용을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저출산 문제의 근간을 되짚어 볼 때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가족이란 무엇이며 왜 가족을 형성하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등과 같은 본질적인 질문과 답이 부족했음.
- 가족이 적절하게 결혼에 대한 사회화를 시키지 못하므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준비시키는 공식적인 결혼준비교육이 더욱 필요함.
-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정보제공보다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태도나 인식 등을 교육하여야 함.
- 저출산 문제의 중심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공동체적 가치관의 퇴색, 이혼율의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관 교육과 관련한 교육정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간의 정책으로는 저출산 해결에 역부족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양성평등한 성역할,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립과 심리적 내재화는 결혼 적령기에 이르러 갑자기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인기 이전부터 인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라 단계적,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함.
- 가치관은 지식과 달리 쉽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친가족적 가치관 형성을 돕고 이러한 가치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친가족적 가치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지금 예비부모들은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정체성을 발견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이 시기에 경험되고 원수되어야 할 발달과업 수행과 가치관 형성이 유보된 상태임.

나. 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

- 교육을 통해 성공적 결혼에 대한 가치 정립, 결혼의 실체에 대한 이해도, 양성평등적 태도 향상됨.
-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긍정적 가족가치관을 조장하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음.
- 남사고등학생이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남아선호도가 여자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낮아진 반면, 여자고등학생이 남자고등학생에 비해 희망자녀수가 더 많아진 변화 보임.
- 대학생 인구교육을 수강한 후 그 이전에 비해 가족주의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결혼 연령 및 첫출산 계획연령이 낮아진 반면, 이상적인 자녀수는 많아짐.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쳤음.
- 남자들의 여성 취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여학생은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짐.
- 결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출산의지가 강했음.
- 인구교육은 그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 수강경험이 가족에 대한 가치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임.
-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건강한 부모의 가치와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줌.

이상의 결과를 보아 저출산 문제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족친화교육, 가치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결과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져온다. 특히 가치는 아동 후기에서 초기 사춘기 동안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정립되어 가므로 교육의 적시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현 교육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 생애교육, 생애설계의 교육적 방향에서 ‘경쟁’ 위주 교육만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의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의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정책에서 그 간의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직접 지원 대비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 분야로 투자의 방향을 돌리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4.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현행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하면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친화교육’의 내용을 계획할 때, 우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의 수준과 범주는 학교 급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 결혼 - 결혼의 의미와 가치, 건강한 자아상의 중요성, 이성교제와 배우자의 선택, 결혼의 동기, 배우자의 기대와 필요, 건강한 결혼생활, 부부특징
- 출산 - 자녀의 의미와 가치, 임신과 출산, 육아 방법, 국내외 출산지원 정책
- 부모역할 - 부모됨의 의무, 동기, 책임,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자녀를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고자 할 때 검토할 것, 세대 간 소통
- 가족 - 현대사회 가족변화, 가족의 의미, 부부간의 역할 분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건강한 가족문화(양성평등, 생명존중)

위의 내용요소들은 국가교육과정 중 초등 실과와 중등의 가정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어서 저출산 극복 교육을 위한 실과와 가정과의 위상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내용요소를 다루고 있느냐보다는 이러한 내용요소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교육과정에서의 실과와 가정과에서의 저출산 극복 교육은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 점이 더 문제시 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 관련 가족친화교육에서 특히 가치교육을 전개할 때는 주입식이거나 일방적이지 아니라 가치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나가는 사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 스스로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갖고서는 교육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며, 교사의 결혼과 가족생활의 모습이 지쳐있거나 부정적일 경우, 그 모습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반영된다. 교사 변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Yu, 2012).

또한 가족친화교육에는 성평등적 관점과 생애 설계 차원, 균형과 조화의 삶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교육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노동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일생을 거쳐 직업적 성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균형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공존의 가치와 삶의 양식) 추구에 대한 의미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은퇴 후 역할상실과 일종의 문화지체로 인해 가족 갈등과 자아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일부 남성들의 사례는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일-가정양립이란 경제적 별이뿐 아니라 가사노동의 수고로움에 대한 가치, 자녀를 길러내는 숭고함, 우리의 삶을 생성시키고 치유하는 ‘살림’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저출산 관련 가족친화교육에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라는 근본적 질문도 동시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기저에는 평등과 균형, 조화의 윤리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족친화교육에는 남녀 모두에게 어떠한 인식과 태도, 실천력이 필요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5. 교육 관련 가능한 정책들과 그 논거,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리로서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수행할 수 있는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성평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가족모델의 창출

저출산이 전통적 결혼관, 자녀관, 가족주의의 해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 회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오늘날 저출산의 해법은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해체 또는 완화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모델을 등장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 연령, 세대, 가족 등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묵인되어 왔거나 간과해 왔던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성평등의 문제이다.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 가족구성원이나 가족 전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이 고려되고 이를 주요 기제로 하여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성평등이라는 질적 균형의 토대에서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하고 이로부터 저출산의 해법을 찾으려 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정책을 논의할 때, 자녀를 낳으면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행복해야 자녀를 낳는다는 일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이 갖는 사회구성원의 충족, 사회화 기능을 고려할 때 가족은 매우 소중하며 국가·사회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36조 1항에도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가족의 유형과 삶의 양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때문에 가족친화적 가치관 일정한 유형이나 양식을 요구한다거나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의미 있게 정립할 것인가, 또한 자신의 가족만큼 다른 가족도 소중하고 의미 있게 여기는 인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성평등과 가족친화적 문화와 가치를 토대로 하는 가족모델을 창출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쉽지는 않겠으나,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젊은 층의 발달과업 중 하나인 가족의 형성과 가족문화 정립을 고려해볼 때, 젊은 층들의 자아실현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훼손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교육 수행의 접근 방식

1)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둔다.

현재 초·중등 저출산 극복 교육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이 때 학교교육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친화교육을 전개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철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과정

의 의미와 책무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교육과정 속에 가족친화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수행하기에 타당성과 효율성이 높은 교과목의 편제와 운영방식을 검토하여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과와 가정과의 가족친화교육에 대해서 저출산 극복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재조명하고 재구성해보며, 교과목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규명해야 한다.

가족친화교육을 수행할 교사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교육이나 학교폭력교육 이수 등과 같이 교사양성과정에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미혼남녀(예비부부) 대상 결혼 준비교육을 강화한다.

발달단계의 시기를 고려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 교육을 실시한다. 결혼관과 자녀관의 형성은 직업 준비와 더불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이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경험 때문에 결혼, 출산 등 자신의 생애설계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 유가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 강의에 대한 인기도, 호응, 요구도를 보면, 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대학에서의 교육 전개는 지속성의 의미에서 정규교과로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 교육은 집단으로 교육 프로그램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도 교육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 철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과목 운영을 대학평가에 반영해볼 수도 있다. 물론 대학사회에서 외부 평가가 주는 집단적 피로감은 있으나,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대상의 일치도 정도를 볼 때, 여타 평가에 비해 거부감은 덜 할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의 적시적 대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볼 때,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활용한 예비부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하고,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3) 학부모, 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

학부모들의 자녀 연령대에 따라 부모나 학부모교육의 내용을

달리하여 저출산 극복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비교적 직접적인 저출산 교육(예, 자녀양육, 형제자매관계 등)을, 청소년기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완화로서 교육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간접적인 저출산 극복 교육을 의도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대입을 위한 정보 습득에 치중해 학부모교육은 진로진학지도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Jeon, Park, Auh & Jung, 2014).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 학부모 교육에는 오로지 입시와 성적에서 성공하는 삶이 자녀교육의 목표가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으로 그 신념이 옮겨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교육은 일방적인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부모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을 이 같은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성인기 부모를 위해서는 고비용, 남성중심의 결혼문화를 지양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소유하려 하거나 간섭, 보호하려는 의식을 지양하도록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는 예비시부모교육, 예비장인장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바람직한 결혼(혼수) 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4) 마스크를 통해 교육 홍보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에는 언론의 역할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언론을 통하여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어가고 양성평등, 세대평등과 같은 가족문화에 대한 담론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미디어는 이러한 가족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작은 결혼식, 형제자매관계,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남성들의 의식 변화, 남녀 간 평등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한다거나 저출산에 대한 사업주와 남성들의 의식 변화와 여성 노동

현실의 개선을 용이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마스크에서 성평등, 결혼, 출산 등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야기하는 내용(예, 광고 등)은 적극 시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를 사회문화적인 성적 불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문화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출산 정책의 기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저출산은 경제적인 요인 외에도 가족문화나 가치관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 가족생활의 경험 속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이 내재되어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과 인식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여 보았다. 따라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족문화나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형성하고 정립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교육적 관점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전개하였다.

핵심적 내용으로서 ‘가족친화문화와 가치관’이 교육적 관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의 실태와 이에 대한 과제를 쟁점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간의 학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제안, 즉 가치관의 변화나 새로운 가족문화가 필요하고 가치관 교육이 중요하다는 논의에서 나아가 그 타당성과 구체적 방법을 조금 더 집중해서 탐색해 보았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은 국가의 강제력이 아니라 사회국가적 배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의 삶과 가족생활이 행복하여 그러한 가족을 다시 재생산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길 때 가능한 것이므로, 국가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의 다양한 삶에 대한 선택

을 존중하고 각각의 요구에 맞는 지원으로 그 의미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족친화문화와 가치관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 정책은 현실에 근거한 실효성 높은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책의 존재가 문제 해결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시적이고 흥행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이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하고, 그 중 실현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 간의 의미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어느 정책이든지 그렇겠지만, 저출산 극복 정책도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현실에 터해서 이상과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으로 실현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책은 인식문화의 개선을 뒷받침하고, 인식문화의 개선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가족친화문화와 가치관의 형성 과정에 ‘교육’이 작용하고 있음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제도교육 안에서 그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와 가정과의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가가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면서 실제로 교육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Cho S-C & Kim M-S (2011). A Study on the Outlook on Marriage and Delivery Will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21 Century Social Welfare*, 8(2), 153-176.

Chung S-H (2009).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Low Fertility and

the Future. *Social Science Research*, 48(2), 1-22.

_____ (2012). A Study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1), 31-52.

_____ (2015).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Problem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8(2), 113-134.

Do M-H (2011).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Awareness on Marriage and Childbirth to Future Marriage and Childbir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163-178.

Embrain Business Division (2016). Research on low birthrate. macromil embrain. 1-33.

Jeon S-K, Park, Auh & Jung (2014). *Development of healthy home life education program model*.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Commissioned Report.

Jun M-K & Oh K-S (2010). Education and Application for Low Fertility·Aged Society in Home Economics Education. *Proceedings of 2010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45-73.

Kim H-H & Kim T-H (2008). The Family Value Changes and Educational Enforcement in the Low Fertility perio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 21-36.

Kim H-K & Lee S-L (2014). The Research on the Values and Lifestyles of Koreans. *Education Culture Research*, 20(4), 281-314.

Kim S-H (2015).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3rd basic plan for low birthrate and aged society. -The question of effectiveness of low birthrate measures must be supplemented-. *Kore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20-21.

Kim T-H (2011).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Based on 2010 population census results and 2011 population projec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2), 101-125.

_____ (2012). The Korean Population Then, Now, and Tomorrow.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91, 6-16.

Kim T-H, Yu J-Y & Kim H-H (2012). A Study on the Marriage

- and Child Value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5(1), 1-22.
- Lee D-W (2016). The new family culture is the first step to overcome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36, 2-4.
- Lee G-S (2012).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a Low Fertility Society by Community Involvement, Public Policy Participation, and Advocacy.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24(1), 73-84.
- Lee S-S (2016a).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Healthy and Welfare Forum*, (2016.01), 51-65.
- _____ (2016b). Strategies and Condi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3rd Basic Pla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Healthy and Welfare Forum*, (2016.02), 6-17.
- Lee S-Y & Hong D-A-G (2014). The Study on the Idea of Marriage and Childbirth Will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9(2), 3-28.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ird Basic Plan for the low birth rate measures low birthrate aged society highlight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s. 1-11.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Curriculum*.
- Na Y-M & Kim M-K (2012). Research on the Values the Pre Parents Generation Places on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215-234.
- No B-M (2013). Conceptual Structure and Policy on Causes of Low Fertility. *Korean Political Science Bulletin*, 21(2), 179-207.
- Oh W-O, Kim H-S & Kim I-H (2014). A Study of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the Childbirth Promotion Education for the Preschool Children and Factors Influencing their Perception of Childbirth Promotion Educa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8(4), 621-647.
- Oh Y-S (2015). The Low Fertility and Individualization - 'Birth Strike' vs 'Birth Choice'. *Trends and prospects*, 94, 46-92.
- Seo J-Y & Kim H-G (2015).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Childbearing Willingness Based on Number of Children-Ever-Bor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8(3), 1-24.
- Wang S-S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25(1), 119-135.
- Wang S-S & Lim, Y-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ducation Association*, 26(4), 147-164.
- Yang J-H (2015). The Effects of Family Life Education on Family Values, the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8(1), 105-120.
- Yi S-H (2012). A Study on Married Women's Timing and Factors of Making the Decision to Stay Childless. *Journal of Women's Studies*, 22(3), 43-88.
- Yu H-J (2016). Future population forecast and practical alternative of aging population policy, Population forecasting and low fertility strateg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ssociation*, Proceedings, 1845-1868.
- Yu J-Y (2012). The Study 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amily Values. *Social Studies Education*, 51(3), 15-33.
- Joongangilbo. [저출산 특특 10회] 저출산 극복 방안. 중앙일보. 2016.8.19.일자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6).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and System for Preventing and Strengthening Cutting of Female Career.
- Yunhap News (2016). 신혼부부 평균 결혼자금 2억 7천만원. 1년새 15% 늘어. 연합뉴스 2016.2.1.일자
- KOSTAT (2016). Social survey.
- _____ (2017). Census.
- 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4). Background and Implications of Lack of Birth Rate. VIP Report for Sustainable Growth, Vol 557.

<국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처해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가족문화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여 저출산 원인을 재인식, 재평가하고, 둘째, 저출산 관련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실태 및 변화를 고찰하며, 셋째,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교육’의 문제를 쟁점화하여 교육적 개입의 타당성, 개입의 실태, 제도교육에서의 교육내용 검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검증, 교육내용의 구성, 교육적 접근으로 가능한 정책들과 논거 등을 살펴보았다.

저출산의 문제는 현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국가사회적 당면 과제로서 그 원인과 대책을 동시에 고려할 때,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가족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요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 요인들을 고려한 해결책으로서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가족문화와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접근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9월 26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12월 13일